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김명찬 외*

1. 문제제기

역사적으로 독일 문제는 언제나 유럽의 문제였고, 유럽 문제는 동시에 독일의 문제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일이 유럽 분할의 요인 또는 적어도 결정적인 계기였던 만큼 독일의 통일은 유럽 통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그렇게 급속도로 진전된다고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1989년 1월 헬무트 콜은 “나는 아데나워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 인용자) 재통일과 유럽 통합이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¹⁾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무렵까지도 두 가지 문제의 동시적 해결은 다분히 이론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역시 원칙적인 수준에서 유럽인의 동질의식은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유럽인’ 그리고 ‘유럽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개념들은 서유럽인들이 자신들을 일컫는 상용(常用)문구가 되었다.

Die Begriffe ‚Europäer‘ und ‚Bürger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sind in Westeuropa zu Formeln der Selbstbeschreibung der Menschen geworden.²⁾

* 독일학연구소 독일 통일 관련 집담회 정치분과 (팀장: 김명찬, 팀원: 이정희, 임홍배, 이민용, 윤순식, 정상수)

1) Zitiert nach: Melanie Piepenschneider: *Deutsche Einheit als Motor der europäischen Einigung. Deutschlands Weg nach Europa*, in: R. Altenhof/ E. Jesse (Hrsg.): *Das wiedervereinigte Deutschland. Zwischenbilanz und Perspektiven*, Düsseldorf 1995, S. 351: „Ich bin mit Adenauer der Auffassung, daß Wiedervereinigung und europäische Integration kein Gegensatz sind.“

2) Josef Janning: *Europäische Integration und deutsche Einheit*,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rsg.):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a.M. 1992, S. 306.

실제로 유럽공동체(EG)는 1992년 2월 7일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Vertrag von Maastricht)에 따라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동의 외교안보 협력을 도모함과 아울러 나아가서는 늦어도 1999년까지 경제·화폐통합을 달성할 뿐 아니라 각국의 국내정치 문제에 관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로써 1955년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유럽경제공동체(EWG)로부터 출발한 유럽통합의 노력은 유럽연합(EU)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 재편의 대세인 '지역적 다극화'(regionale Multipolarisierung)의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럽의 지역적 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관련지으면 유럽 통합의 전망 속에서 순조로운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과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70년대 이후 독일은 유럽통합 과정에 가장 큰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비용의 압박과 함께 독일이 계속해서 이른바 '대금 결제자'(Nettozahler) 내지 '물주'(Zahlmeister) 노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 역시 일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냉전적 질서의 해소와 함께 독일의 역할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독일의 초대국화가 다시 패권주의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독일의 통일은 유럽연합의 활동폭의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여기서 '독일적 유럽'(deutsches Europa)이 아닌 유럽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독일 통일을 '유럽적 독일'(europäisches Deutschland)의 건설과 합치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제기된다. 통일 독일이 당면한 문제는 그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전후의 유럽 질서와 분단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독일의 분단, 그리고 양자의 상호관계를 규정했던 것은 동서 진영대립에 따른 냉전체제이다. 50년대의 아테나워 시대에는 '친서방 정책'(Westbindung)이 독일통일에 비해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되었고, 그것은 유럽 질서의 안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서독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독일 통일의 전제라는 상황인식의 결과였다. 서방측 연합 3국간의 독일협정(1952)에 따라 기본적인 주권을 되찾은 서독은 NATO 가입(1955)을 통해 서방의 안보체제에 합류하는 한편, 할슈타인 원칙의 천명(1955)으로 동독의 외교적 고립을 시도했으며, 1956년에는 공산당이 불법화되기에 이른다. 전후 서독의 이러한 유럽정책 노선과 국내정책은 사실상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진영의 이른바 “이중 봉쇄 double containment”³⁾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즉 서방 진영은 분단 독일을 통해 동구의 팽창을 봉쇄함과 동시에 독일이라는 불안 요인도 함께 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서쪽 부분이 없다면 서유럽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의 균형 역시 서방측에 유리하게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소련이 동유럽의 여러 민족들에 대해 줄곧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독일 문제의 억제 역시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유럽에 있어서 독일 문제의 역사는 대단히 근대적이면서도 고대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hne den westlichen Teil Deutschlands ist aber nicht nur West-europa nicht zu sichern, sondern auch die globale Balance nicht zugunsten des Westens zu halten. Ohne den fortdauernden Druck der Sowjetunion auf die Völker des Osteuropas wäre aber auch das containment der deutschen Frage nicht in der bisherigen Weise fortzuführen. So also ist festzustellen, daß in der gegenwärtigen Lage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Frage in Europa auf eine sehr moderne und sehr altertümliche Weise aufgehoben ist.⁴⁾

60년대에는 CDU의 친서방 강화노선과 SPD의 독일통합 우선 정책이 줄곧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1969년 브란트의 동방정책 선언과 함께 동·서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에서 벗어날 출구가 모색되기 시작한다. 70년대 이래 일관되게 계승되어온 서독의 화해적 동방정책은 냉전적 질서의 긴장

3) Michael Stürmer : Die deutsche Frage in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in: Klaus Lange(Hrsg.): *Aspekte der deutschen Frage*, Herford 1986, S. 32.

4) M. Stürmer: a.a.O., S. 33f.

을 완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슈미트 정부는 대유럽 관계와 내독 관계의 실용적 절충을 도모하여, EG 내에서 독일의 경제적 기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역할을 인정받는 한편 동독과의 구체적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1972년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이 체결되고 1974년 이후 분야별 후속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냉전적 질서의 외인에 의한 독일통일의 장애는 사실상 제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70년대의 동방정책이 어디까지나 서방세계와의 결속이 공고해진 바탕 위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SPD노선의 브란트와 슈미트에게는 서방에의 편입 자체가 정책의 중심은 아니었다. 브란트는 '유럽안보협력회의'(KSZE = Konferenz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의 테두리 안에서 서유럽과 동유럽을 묶어주는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다. 독일의 행동반경을 규정하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통일에의 길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3.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3.1. 통일 독일의 새로운 위상

베를린 장벽 붕괴 몇 달 후인 1990년 2월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독일 문제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곧 이어 같은 해 9월까지 진행된 이른바 '2+4회담'의 성공적인 매듭과 함께 독일은 민족국가로서의 주권을 온전히 되찾았다.⁵⁾ 다른 한편 동부·중부·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국가로서 통일 독일은 서방의 복지사회와 거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동구인들의 기대감이 교차하는 지점이 되었다. 동부·중부 유럽을 유럽통합 과정에 끌어들이는 일은 독일의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통령 헤어초크 Roman Herzog는 "우리가 동구를 안정화시키지 못하

5)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2+4 조약'은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차대전 결과로 제약받은 독일의 대내외적 주권이 완전히 원상회복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Vgl. W.Weidenfeld/K.-R. Korte(Hrsg.):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a.M. 1996, S. 708ff.

면 동구가 우리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6) 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유럽 내에서 독일의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말해 준다.

동서 갈등의 극복과 더불어 독일은 이제 강대국 진영들의 세계정책적 분할경제선의 위치에서 벗어나 유럽의 중심부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은 이웃나라들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비록 그 강도는 달라도 이웃나라들과 우호조약들을 통해 결합되어 있다.

Durch die Überwindung des Ost-West-Konfliktes liegt die Bundesrepublik nicht mehr an der weltpolitischen Trennungslinie der Machtblöcke, sondern in Zentraleuropa. Deutschland ist nun von Nachbarn umgeben, mit denen es - durch Freundschaftsverträge -, wenn auch unterschiedlich in der Intensität, verbunden ist.⁷⁾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된 독일이 국제적인 과제와 책임을 더 많이 떠맡아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유럽 통합이 군사안보적 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은 분명하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의 과도기 상황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독일의 경제적 기여도는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잠재력의 측면에서 독일의 경제적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지정학적 상징' 이상의—중심적 위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불안 요인도 되고 있다. 통일 독일이 새로운 유럽 질서에서 주도권 강화를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통합의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독일에 대해 '통합을 통한 제어'(Kontrolle durch Integration) 정책을 견지해온 프랑스 측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독일은 프랑스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유럽 통합을 주도해 가는 해결책을 택하고 있다.⁸⁾ 장벽 붕괴 당시 유럽공

6) M. Piepenschneider: a.a.O., S. 347f.: „Wenn wir den Osten nicht stabilisieren, destabilisiert der Osten uns.“

7) Wichard Woyke: *Außenpolitische Kontinuität - aber auch Veränderungen. Fünf Jahre deutsche Außenpolitik*, in: R. Altenhof/E. Jesse (Hrsg.): a.a.O., S. 368.

8) 가령 프랑스가 적극 주도한 유럽단일통화(ECU)의 채택은 독일 마르크화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동체 국가들은 독일이 통일 이후에도 NATO에 잔류해야 한다는 점, 통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도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통일은 유럽통합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유럽 통합에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2. 동독의 몰락 - 유럽 공동체의 확장

1989년 12월 유럽의회는 독일의 통일이 유럽 통합의 전망 속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독일 민족이 자신의 자유결정에 따라 다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유럽의 평화상태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재통일의 과정은 제반 협정과 조약을 준수하고 또한 대화와 동·서 협력의 맥락에서 헬싱키 조약 결의문에 담겨 있는 제반 기본원칙들을 준수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완수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장차 유럽 통합을 내다보면서 그 기초를 닦는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Wir streben die Stärkung des Zustandes des Friedens in Europa an, in dem das deutsche Volk in freier Selbstbestimmung seine Einheit wieder erlangt. Dieser Prozeß muß sich auf friedliche und demokratische Weise unter Wahrung der Abkommen und Verträge sowie sämtlicher in der Schlußakte von Helsinki niedergelegten Grundsätze im Kontext des Dialogs und der Ost-West-Zusammenarbeit vollziehen. Er muß auch in die Perspektive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eingebettet sein.⁹⁾

원래는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 이후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회원국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이 예상 외의 빠른 속도로 진전됨으로써 확대된 독일 영토가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에 편입되는 형국이 되었다. 실제로 동·서독 통일이 법적 효력을 갖기 시작한 1990년 10월 3일자로 유럽공동체 법규의 80%가 구 동독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구 동독 사회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과도기의 예외 영역들이 존재한다. 농업, 통상, 노동시장 보호, 환경보호 등의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럽공동체가 요구하는 적정수준에 크게 못

9) Zitiert nach: Frank R. Pfetsch: *Deutsche Einheit und europäische Integration*, in: U. Liebert/W. Merkel(Hrsg.): a.a.O., S. 305f.

미치는 환경 분야의 예외조항은 1995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도 이 기한의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생산성이 취약한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¹⁰⁾

구 동독 지역의 유럽공동체 편입 이후 유럽공동체 내에서 통일 독일의 공식적 지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다만 1993년까지 새로운 5개 주의 대표 자격으로 18명의 참관인이 유럽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정규적인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별첨 도표 참조).

3.3. 동유럽과 통일 독일

동서 갈등의 종식과 함께 양극적 질서가 퇴조하고 다극적 질서가 창출되면서 중부 유럽 강대국들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그 중심적 위치에 있는 독일의 위상은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정책은 이전보다 더 많이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개혁의 성공 여부에 좌우된다.

Stärker als zuvor hängt die deutsche Politik am Gelingen der Reformen in Osteuropa und der Sowjetunion.¹¹⁾

독일의 적극적인 동방진출로 인해 범유럽 질서에서 자연스럽게 독일의 패권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가령 독일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다른 한편 독일의 동방정책이 유럽연합의 내적 결속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독일이 유럽연합의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가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자끄 들로아 J. Delors의 다음 발언은 그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10) 1991-1993년 기간 동안 구 동독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EG의 투자액은 63억 DM(1994년도 24억 DM)에 이르며, 이와는 별도로 1994부터 1999년까지 '구조조정 기금'(Strukturfonds)으로 1,360만 ECU(European Current Union; Europäische Währungseinheit; 유럽단일통화)이 지원될 계획이다(1996년 현재 1 ECU는 1.82 DM에 해당됨).

11) J. Jannig: a.a.O., S. 307.

“유럽공동체를 동쪽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회원국은 우선 12개 회원국 공동체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늘날 유럽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강화시켰다가는 다시 거대구조 내에서 회석시키는 식으로 갈피를 못잡고 동요하는 것이다.”

„Derjenige, der eine Osterweiterung der Gemeinschaft anstrebt, muß zuerst für eine Stärkung der Gemeinschaft der Zwölf eintreten [……]. Die größte Gefahr für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ist heute ein Hinunderschwanken zwischen einer nach innen gestärkten Gemeinschaft und ihrer Abwässerung innerhalb eines größeren Gefüges.“¹²⁾

그러나 독일 통일이 그러했듯이 독일의 동방정책 강화는 상황의 강제에 따른 필연이자 장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도 독일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중·동부 유럽의 정치적 지도층에서 독일에 대한 기대가 크며, 가령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단연 독일을 적극적인 협력 상대로 받아들이고 있다.¹³⁾ 둘째, 과거 냉전시대에 여타의 서유럽 국가들은 알게 모르게 독일을 동방정책의 교두보로 앞세웠었다. 셋째, 무엇보다 동구에서의 상황추이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나라가 독일이다. 가령 동구 개혁의 성공은 동구로부터의 난민유입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안정화 정책 Stabilisierungspolitik”¹⁵⁾을 동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서 독일은 통일 이후 동구 여러 나라들과 우호친선조약을 체결하였으며,¹⁶⁾ 여기서 독일은 각국의 개혁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쌍방간에 자국에 거주하는 동족의 권익 보호에 합의하였다.

12) Zitiert nach: F. R. Pfetsch: a.a.O., S. 317.

13)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1995년도에 동구권과의 교역량은 처음으로 미국과의 교역량을 능가하였다. Vgl. W. Weidenfeld/K.-R. Korte(Hrsg.): a.a.O., S. 282.

14) 1992년도에 서독에 입국 신청을 한 동구 난민은 44만여 명이며, 그중 함부르크 시가 수용한 인원은 2만여 명으로 이는 같은 해에 영국이 받아들인 숫자와 비슷하다. 또 과거 동독에 주둔하던 380,000명의 소련군과 그 가족들의 순조로운 철수를 위해 독일은 1994년까지 150억 DM를 지원했다. Vgl. Wolfgang-Uwe Friedrich: *Auf der Suche nach Stabilität*, in: R. Altenhof/E. Jesse(Hrsg.): a.a.O., S. 402.

15) W. Woyke: a.a.O., S. 376.

16) 1990년 소련, 1991년 폴란드, 1992년 헝가리, 체코와 각각 우호친선조약 체결.

4. 전 망

지금까지 유럽의 통합은 “단계적 통합 abgestufte Integration”¹⁷⁾의 구상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초민족적 의사결정 절차와 정부간 협력의 혼합 형태 Mischform von supranationalen Entscheidungsverfahren und intergouvernementaler Kooperation”¹⁸⁾로서, 민족국가간 이해의 상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된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이후 유럽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금까지 유럽질서와 대치해 왔던 동구 지역의 통합 문제일 것이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상층부 국가들의 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은 여전히 저임금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유럽의 이중구조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보면 과거의 외부적 압박 요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유럽 통합의 내부적 결속은 약화될 수도 있으며, 독일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이룬 마당에 유럽 통합의 현실적 적절성이 희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구 국가들과 친족성을 가졌던 구 동독 지역의 실질적 통합 과정은 독일의 동방정책 뿐 아니라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이 추구하는 관심사의 핵심은 독일이 패권적 지위를 점하지 않고서도 독일의 발전이 허용되는 그런 유럽적 구조들을 창출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유럽 통합을 매개로 해서만, 다시 말해 차별대우나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상호 제한 및 통제의 방식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럴 때에만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호기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eutschlands Interesse besteht also in der Schaffung europäischer Strukturen, die ihm seine Entfaltung erlauben, ohne es in eine hegemoniale Position zu bringen. Das kann nur mittels europäischer Integration geschehen, d.h. durch gegenseitige Beschränkung und Kontrolle ohne Diskriminierung und Priviligierung. Nur dann kann Deutschland die Chancen seiner geographischen Mittellage ökonomisch und politisch optimal nutzen.¹⁹⁾

17) F. R. Pfetsch: a.a.O., S. 315.

18) Ebda.: S. 316f.

<참고> 유럽연합 주요 지표(1994년 기준)²⁰⁾

항 목 나 라	유럽의회 의원수(명)	회원국 분담금 (단위: 100만DM)	회원국 지원금 (단위: 100만DM)
독 일	99	41,120(25%)	14,875(12.9%)
벨기에	25	5,431	4,836
덴마크	16	2,495	2,877
핀란드	16	-	-
프랑스	87	24,154	19,100
그리스	25	1,910	9,323
영국/북아일랜드	87	12,350	10,120
아일랜드	15	1,230	4,601
이탈리아	87	14,934	10,044
룩셈부르크	6	318	807
네덜란드	31	8,171	4,650
오스트리아	21	-	-
포르투갈	25	2,339	5,856
스웨덴	22	-	-
스페인	64	9,080	15,078
총 계	626	123,533	116,058

참고 문헌

Brauch, Hans Günter: *Probleme und Chancen der deutschen Einheit für die Sicherheits- und Abrüstungspolitik in Mitteleuropa*, in: Ulrike Liebert/Wolfgang Merkel(Hrsg.):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 - Strategien - Kontroversen*, Opladen 1991, S. 343-372.

19) W. Woyke: a.a.O., S. 372.

20) 위의 자료는 다음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Statistisches Jahrbuch* 1996, S. 40, 140ff.

- Friedrich, Wolfgang-Uwe: *Auf der Suche nach Stabilität*, in: Ralf Altenhof/Eckhard Jesse(Hrsg.): *Das wiedervereinigte Deutschland. Zwischenbilanz und Perspektiven*, Düsseldorf 1995, S. 383-421.
- Janning, Josef: *Europäische Integration und deutsche Einheit*,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rsg.):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a.M. 1992, S. 300-308.
- Markovits, Andrei R.: *Die Deutsche Frage - Perzeptionen und Politik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n: U. Liebert/W. Merkel(Hrsg.): a.a.O., S. 321-342.
- Ménudier, Henri: *Keine Angst vor Deutschland? Die vereinigte Bundesrepublik aus ausländischer Perspektive*, in: R. Altenhof/E. Jesse(Hrsg.): a.a.O., S. 327-344.
- Pfetsch, Frank R.: *Deutsche Einheit und europäische Integration*, in: U. Liebert/W. Merkel(Hrsg.): a.a.O., S. 299-320.
- Pieperschneider, Melanie: *Deutsche Einheit als Motor der europäischen Einigung. Deutschlands Weg nach Europa*, in: R. Altenhof/E. Jesse(Hrsg.): a.a.O., S. 345-362.
- Stürmer, Michael: *Die deutsche Frage in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in: Klaus Lange(Hrsg.): *Aspekte der deutschen Frage*, Herford 1986, S. 21-34.
-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rsg.):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a.M. 1992, ²1996.
- Woyke, Wichard: *Außenpolitische Kontinuität - aber auch Veränderungen. Fünf Jahre deutsche Außenpolitik*, in: R. Altenhof/E. Jesse(Hrsg.): a.a.O., S. 363-382.
- 통일원: 『독일통일실태 자료집 - 비경제 분야』, 서울 1992.